

# ‘봉은사 주지 추천위서 추천해야’

## 화쟁위, 봉은사 보고서 채택...총무원·봉은사 전달

### “의연·무공 모두 떠나라”

고불총림의 총림지정 해제 건과 관련해 고불총림 백양사가 10월 10일 임회를 열고 주지 시몽 스님의 사퇴와 의연·무공 스님의 잠정권 박탈과 이들의 산문출송을 결의했다.

임회 시작에서 방장 수산 스님은 유시를 내렸다.

수산 스님은 유시에서 △고불총림 해체에 관한 분쟁 취하·종식 △고불총림 해제 발의자의 참회와 중앙총회의 원직 사퇴 △지선 스님의 유나직 사임과 노석산방 방사 정리 △주지 시몽 스님의 주지직 사퇴를 명했다.

이에 대해 백양사 임회는 수산 스님의 유시를 받들어 투표를 통해 주지 시몽 스님의 사퇴, 의연·무공 스님에 대해 잠정권 박탈 등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주지 시몽 스님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와 주지 사퇴만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의 화쟁 원리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봉은사 사태의 해법으로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을 인정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주지 임명할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채택해 총무원과 봉은사에 전달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은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은사 소위원회(위원장 지홍)이 제출한 ‘직영사찰제도 종합적 개선 및 봉은사 운영과 문제해결방안’(이하 방안을 11일 전체회의에서 전원 합의로 가결·채택했다. 총무원 집행부와 봉은사에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안의 핵심은 봉은사는 원로회의, 총무원, 중앙총회 등 종단 입장을 존중해 이미 진행된 직영사찰 지정을 수용하고, 총무원은 봉은사 입장을 존중해 운영 및 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 차기 주지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임명할 것이다.

또, 방안은 △포용과 화쟁의 종단 운영과 포용과 덕성의 인사를 할 것 △후임 봉은사 주지 인사는 봉은사가 종단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종단은 징계 문제 등에 봉은사 입장을 배려해 합리적으로 정리할 것 △총무원과 봉은사는 상호 예의와 격식을 갖춰 그동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



조계종 화쟁위원회 봉은사소위원회 위원장 지홍 스님과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화쟁위 부위원장 원택 스님. (왼쪽부터)

고 화합할 것을 기본으로 작성했다.

봉은사 소위원회 위원장 지홍 스님은 “방안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총무원과 봉은사 입장이라는 양극단을 버리고 넘어서서 한국불교의 실상에 근거한 중도의 간절한 바람인 1994년 개혁정신의 계승, 한국불교와 지역불교의 균형발전이라는 중도 또는 화쟁의 관점으로 문제해결이 이뤄질 길 바라는 전제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화쟁위 대변인 법안 스님은 “종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직영사찰 운영을 건전화·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지난 4월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총무원과 봉은사 주장에

관리인(주지)에 대해 △4년 임기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 △2년 주기 인사사고와 평가 △총회의원 겸직 불가 등 직영사찰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화쟁위 대변인 법안 스님은 “종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직영사찰 운영을 건전화·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지난 4월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총무원과 봉은사 주장에

‘종단발전과 개혁실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양 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화쟁위 보고서에 대해 “총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봉은사 황찬의 문화사업단 단장은 “명진 주지스님은 화쟁위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직능대표 선출 관행 바뀌어야

## 직능 전문가 명문화 및 직능별 대표기구 추천 존중 필요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대원·현산, 이하 수좌회)는 10월 8일 성명서를 통해 “수좌회가 추천한 인물을 선원 직능대표로 선출해 달라”고 공개요구한 바 있다. 수좌회의 이번 공개요구를 두고 교계에서는 조계종 중앙총회 직능대표 선출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능대표는 율원·선원·강원·교육·포교·사회·복지·문화·법제·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중 각 분야별 2명씩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다. 하지만 중앙총회의원선거법 제40조 5항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직능대표의 임후보 조건은 일반적인 중앙총회의원 자격과 같다.

또, 직능대표를 선출하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중앙총회에서 추천한 총회의원이 아닌 스님 6인과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어 직능대표를 두고 계파간 나눠먹기는 예정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직능대표 20인과 10인의 비구니위원을

심의·선출한다. 하지만 비구니위원의 경우 전국비구니회 추천을 거친 스님들을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심의만 할 뿐이다.

수좌회가 성명서에서 “종법상 직능대표로 분야별 2인이 명시돼 있지만 전국선원수좌회를 비롯해 율원·강원의 중앙총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스님은 아무도 없다”고 밝힌 부분은 이미 종단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명시하지는 취지에서 2006년 이후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중앙총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직능직 선출에 기준을 세우고자 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008년 3월 임시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개정안은 이후 총회 차원에서는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수좌회 금봉 스님은 “수좌회 추천 인사가 직능대표로 선출되는 것은 종단과 수좌회의 소통의 기회와 폭을 넓히게 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직능대표가 선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납골사업 본산 된 해인사 바로 잡겠다”

## 해인사 출신 300여 승려 ‘정상화추진위’ 구성 움직임

해인사 출신 스님 300여 명이 “납골 사업 본산이 된 해인사를 바로 잡겠다”며 ‘해인사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나섰다.

‘해인사 정상화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원학·여연·수원)’는 10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학 스님(해인강원동문회장), 여연 스님(강진 백련사 주지), 종월 스님(서울 경국사 주지), 적광 스님(중앙선거관리위원)

등 해인사 중진스님이 참석해 “주지 선각 스님에 의해 수행·교육 중심 도량이란 해인사가 납골 사업에 전념하는 수의사업체가 됐다”고 성토했다.

스님들은 “해인사와 해인사 주지 스님 이름으로 노골적이고 낮 뜨거운 납골분양 사업과 장의용품 판매 사업이 자행돼 전국의 스님과 불자들의 실망이 극에 달했다”며 “해인사 각 문중 구성원·승가대학 동문들 비롯한 해인사를 거쳐가며 수학·정

진했던 스님들이 나서 해인사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스님들은 주지 선각 스님에게 △해인사와 고불암 명의의 납골·장의용품 사업 중단 △해인사 토지 매각 및 대금 사용처 등 각종 의혹 해명 △해인사 대중이 참여하는 감사반 구성 △개신교 관련 재단이 추진 중인 가야산 골프장 사업 등의 의혹 해명 △선각 스님 개인소유 재산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인사 총무원장 심우 스님은 스님은 제32·33대 집행부의 해인사 실사내역을 배포하며 “모든 감사 결과가 총무원 재무부에 보관돼 있다. 해인사에 보관돼 있다. 해인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인사 방장스님에게는 “해인

사 주지가 추진 중인 납골 사업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스님들은 총무원과 중앙총회에도 “해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연 스님은 “일부 언론이 총회의원이 되기 위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고, 적광 스님은 “그런 의혹이 있다면 나도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장을 찾았던 해인사 총무원장 “모든 감사 결과가 총무원 재무부에 보관돼 있다. 해인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 총회의원 후보 자격심사 강화

## 조계종 총무원 공명선거 당부 담화문 발표

10월 28일 제15대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이 임후보자의 자격심사 강화와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엄정 처벌 등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10월 12일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가 청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는데 종단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총무원은 “이번 선거는 그동안 쌓아온 종단안정과 화합의 기초 위에 한국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중공의와 원용화합의 전통을 되살리고, 수행과 승흥을 진작하며, 특히 종단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비전 중심의 여법한 선거가 되도록 제33대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정선거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후) 등 승가단체들은 13일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종단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논평했다.

승가단체들은 논평에서 “총무원은 성명 발표를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단행해 구태한 선거 문화를 일소하고, 청정선거 풍토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 비구니 총회의원 대부분 교체키로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10월 14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5대 비구니 총회의원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의원 후보에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교육), 서울 아산병원법당 지홍 스님(사회), 운문사 일진 스님(강원), 청암사 상덕 스님(율원), 석남사 구과 스님(법제), 일산 법계사 지성 스님(포교), 前 문화부장 탁연 스님(문화), 대전 금강사회복지관 정은 스님(복지), 전국비구니회 재무부장 성관 스님(행정)이 선출됐다. 현 중앙총회의원 스님 중에는 불영사 일운 스님만이 재추천됐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 韓國佛教 太古宗

## 宗正 慧草

僧正院院長 南坡  
副院長 寶峰  
副院長 法藏  
元老會議議長 一宇  
副議長 慧宗  
副議長 德化

總務院長 印空  
副院長 華鏡  
中央宗會議議長 靈祐  
副院長 常虛  
中央司正院長 芸谷  
副議長 一雲

### 종도일동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 TEL 02)739-3450 FAX 02)739-3470

# 大韓佛教 天台宗

## 宗正 김도용 대종사

### 宗正사서실장 정장호

총무원  
총무원장 주정산  
총무부장 김무원  
교무부장 김유정  
재무부장 김용암  
교육부장 김세운  
사회부장 김경천  
규정부장 김영제

총의회  
총의회의장 김도산  
총의회부부장 정명구  
최인규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부이사장 전운덕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조용문

중앙신도회장 김학송  
참의원장 권영철  
원각불교사명연구회장 권기중

■ 총본산 구인사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1-1번지 전화 043)423-7100 팩스 043)420-7399 www.chentae.org